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 개정!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해결 요구!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의 ‘안전한 일터’에서 학교는 예외? 건강과 안전도 차별없는 학교 만들어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6. 4. 23.(목) 오전 11:00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앞
-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순서: 약 30분 내외

순서	발언자	비고
여는 발언	정인용 본부장	
투쟁 발언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연대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청희 집행위원장	
현장 발언	[급식 조리실무사] 최은형 인천지부 급식조리분과장 [특수교육지도사] 안명자 경기지부 광주하남지회장 [과학실무사] 김혜원 서울지부 조합원	[사서] 서정은 전국사서분과장 증언글 첨부
기자회견문 낭독	참석자	

□ 학교 앞에서 멈추는 이재명 정부의 ‘안전한 일터’ 선언 실태 폭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리흡 유해물질 지정 및 현업고시 확대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26년 4월 23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안전한 일터’에서 학교 노동자들이 배제·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며 조리흡 유해물질 지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현업고시 확대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은 여전히 업무에 따라 안전할 권리가 나뉘는 ‘안전의 이중구조’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급식실 폐암의 주범인 ‘조리흡’의 유해물질 지정과 현업 업무 범위의 대폭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안전한 일터’ 약속이 학교 담장 앞에서 멈춰 서 있다.” 고 강하게 비판하며 “ 학교 내 모든 안전 차별을 철폐하고, 조리흡 유해물질 지정과 현업고시 확대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하겠다” 고 결의를 밝혔다.
-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자를 예방의 주체로 세우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무색하게 학교 노동자들은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며 “고용노동부는 조리흡의 유해물질 지정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산안법 적용 제외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 최은형 인천지부 급식조리분과장(조리실무사)은 “폐암에 걸리는 것이 아닐까 전전긍긍하며 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두렵기까지 하다” 며 “아이들이 꿈을 펼치고 뛰어노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이 급식실” 이라고 호소했다.
- 안명자 경기지부 광주하남지회장(특수교육지도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학생과 휠체어 무게를 포함, 수십 키로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 한다며 “특수교육지도사의 87%가 사고를 경험할 정도로 현장은 위험” 하다고 폭로했다.
- 김혜원 서울지부 조합원(과학실무사)은 “화학물질을 매일 취급하는 과학실무사가 현업 업무에서 배제되어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이재명 정부 안전 정책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 이라며 실질적인 산업안전 관리를 촉구했다.
- 서정은 전국사서분과장(사서)은 증언 글을 통해 “십여 년 동안 학교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손가락 질환으로 변형이 왔고, 어깨 통증과 손목터널증후군을 겪었으며, 비염과 먼지 알러지로 인해 눈에 출혈이 생기기도 했다.” 며 “산재 신청이 적다는 것이 산재가 없다는 뜻은 아니며, 노동조합을 통해 ‘일하다 다치면 산재’ 라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안전 차별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 라고 꼬집으며 “일하다 죽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학교 현장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고 촉구했다.

* 붙임: 기자회견문 1부. <끝.>

[붙임: 발언문 및 기자회견문]

[여는 발언]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안전한 일터’를 국정 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산재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온기는 학교 담장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학교 노동자들은 산업 안전보건법의 ‘현업고시’라는 낡은 장벽에 가로막혀 안전할 권리조차 차별받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은 업무에 따라 안전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 과학실무사, 도서관 사서는 높은 위험도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현업’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교육 등 법령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지도사의 87%, 사서의 93%가 근무 중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라는 명분 아래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폐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폐암의 주범인 ‘조리흡’이 아직도 법상 유해물질로 지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예방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조리흡을 즉각 유해물질로 지정하고, 퇴직 후에도 노동자들이 자신의 건강권을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대상 물질에 포함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얻은 질병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당연한 상식을 이제는 법령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업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에 나서야 합니다. 안전은 시혜나 복지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할 헌법적 기본권입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내 모든 안전 차별을 철폐하고, 조리흡 유해물질 지정과 현업고시 확대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발언]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윤희입니다.

‘후진적 산재 공화국을 벗어나자’,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예방의 주체로 세우겠다.’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산재를 줄이겠다고 했던 말들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정부가 ‘안전한 일터’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학교 노동자들은 법적 사각지대와 차별 속에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현업’에 들지 못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수많은 노동자가 이 ‘비현업’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특수아동의 돌발 사고, 과학실무사의 위험물질 노출, 사서와 행정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과 감정노동은 노동부가 말하는 ‘현업’ 노동자만 비껴갑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고를 몸소 증명해야 이 차별을 끝낼 것입니까?

여기에 더해, 학교 급식실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폐암의 주범인 ‘조리흡’이 여전히 법상 유해물질로 지정되지 않아 예방과 보호 조치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조리흡을 즉각 유해물질로 지정하고, 퇴직 후에도 건강권을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대상 물질에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갈라치기 하는 현실을 두고 산재 공화국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올해 6월 30일은 현업 업무고시를 다시 검토하는 법적 기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업 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조리흡의 유해물질 지정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산안법 적용 제외 자체를 폐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는 기다림이 아닌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공공운수노조는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문제 해결과 현업고시 확대를 위한 더 큰 투쟁으로 학교 현장의 안전 평등을 앞당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 발언]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학교는 산재 백화점”이라는 말을 오랫동안 외쳐 왔습니다. 저희 한노보연은 지금 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학교에서 현업 업무로 판단되어 산업재해가 다발하는데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교육지도사, 과학실무사, 사서들을 만나 여러 안전과 건강 관련 현실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업종 노동자들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말 그대로 산재 백화점에서 일하는데도 산업재해 신청을 하기가 어렵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들은 하루 종일 장애 학생들을 전담해 수업 지원, 이동 지원, 휠체어 밀기, 신변 처리 등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때 장애 학생들의 무게가 노동자들의 몸으로 그대로 전해지는데, 학생들은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큼니다. 휠체어를 밀고, 기저귀를 갈다가 손목 통증과 허리 통증을 겪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하게 학생이 공격을 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학생의 돌발 행동을 하면 진정시키는 일도 이들의 고충 중 하나입니다.

과학실무사들은 학교에서 실험을 하면 화학물질이나 금속 재료, 저울, 추, 지구본처럼 중량물을 많이 취급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각종 교구를 취급하고, 세척, 건조, 보관 등 후처리와 정리정돈까지 도맡아 할 때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는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자세나 손목, 어깨 등을 사용하는 반복적인 동작을 하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베이고 깔림, 화학물질 사고와 화상까지,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실험 중에 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항상 신경이 곤두서있는 것 역시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입니다.

사서 업무는 보통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본적으로 한 손에 책 여러권을 옮겨 잡아서 배열하는 일을 자주 합니다. 중량물 취급이죠. 그러다보면 손가락, 손목, 허리, 무릎까지 전신에 통증이 옵니다. 방학마다 장서 점검을 하면 몇천 권씩 그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도 책을 몇 권 이상 들면 신체에 부담이 온다든지, 환기를 해야 한다거나, 다치지 않게 일하는 법은 전혀 교육받지 못합니다.

세 직종 노동자들을 만나본 결과, 이 세 직종의 위험이 각기 다르지만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교육이 없다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과학실험을 안전하게 하는 법, 장애 학생이 안전하게 지원하는 법, 도서관을 쾌적하게 운영하는 법에 대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이들 노동자가 어떻게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지도 않습니다. 산업재해 신청이 권리라고 말하는 곳은 노동조합 뿐이고, 학교에서는 사고가 아니면 산재신청이 어려울 거라는 말만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이 세 직종에, 나아가 학교 모든 노동자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법이 적용되면 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해 노동자가 참여해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할 수 있고, 노동자 몸과 건강을 기준으로 노동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화상으로, 넘어지고, 칼에 베이고, 전신에 골병이 들며 폐암 산재로 고통받고 목숨까지 잃는 급식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튀김, 볶음 요리처럼 고온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흠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졌지만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노동자들이 골병 들지 않고 일하기 위해 오랫동안 배치기준 개선을 외쳤지만 너무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곳이라서 이제는 일하고싶지 않은 일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급식 유해물질 규제, 환기 등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과 제도상 개정을 통해 더는 급식실이 죽음의 일터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투쟁에 저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현장발언1] 최은형 인천지부 급식조리분과장 (급식 조리실무사)

안녕하세요 저는 7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는 조리실무사입니다.

저희들은 매일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뜨거운 불 앞에서 적게는 수 백 명, 많게는 수 천 명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재료 전처리와 손질, 대량으로 튀김, 볶음 구이 등의 음식을 하고 배식 및 청소 등 하루 평균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후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손이 붓고 저려서 양치하기도 힘듭니다. 쉬고 싶어도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학교로 다시 출근을 합니다. 중식시간 시작 전까지 조리가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적은 인력으로 위생이라는 틀 안에서 이리저리 뛰어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부딪쳐 다치고 시퍼렇게 멍들어 골병이 들어갑니다.

또 이제 더워지는 날씨에 뜨거운 기름솥, 국솥 앞에서 체감온도 50도가 넘는 온도도 견뎌 내야합니다. 그리고 조리를 하면서 뜨거운 수증기와 고온의 끓는 기름에서 올라오는 매캐한 연기 등 여러 가지 조리흡에 노출되어 일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장기간 증기와 연기를 들이마시면서 호흡기질환도 달고 살고 주변에서 폐암에 확진되었다는 동료들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 7년차 조리실무사인 저는 이렇게 계속 일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참 무섭습니다.

내가 언제 폐암에 걸리는 것이 아닐까 전전긍긍하며 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흡이 폐암의 주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동료의 죽음과 질병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조리흡을 유해물질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의 예방 대책과 보호 조치는 늘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살기 위해 들어온 직장이 죽음의 터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조리흡을 산안법상 유해물질로 즉각 지정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리흡을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도 국가의 책임 아래 정기적인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잠복기가 긴 폐암의 특성상 퇴직 후 사후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실의 환기시설을 빠르고 실효성있게 개선해야 합니다. 환기시설 개선 공사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공사를 하더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가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예산과 행정 절차를 핑계로 노동자의 생명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조리흡의 유해물질 지정과 건강관리카드 도입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환기시설 개선 공사도 빠르고 제대로 완료해야 합니다. 노동 존중 사회의 시작은 일터에서 얻은 질병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꿈을 펼치고 뛰어노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이 급식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모자란 인력과 부족하고 노후화된 시설로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급식실, 불안하고 위험한 급식실이 아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실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발언2] 안명자 경기도지부 광주하남지회장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지도사는 장애 학생의 옆에서 교육활동을 밀착 지원하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포기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 등교지도를 시작으로 10분 쉬는 시간은 대소변 등 신변처리 지원, 교실 간 이동지원을 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식사지도, 오후에는 방과후 수업 지원, 하교 지도까지 하고 나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휴게시간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학생과 휠체어 무게를 포함, 수십 키로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근골격계 직업병에 걸립니다. 특히 좌식 생활을 하는 유치원과 상대적으로 중증장애 학생들이 많은 특수학교에서는 산업재해의 위험과 피해 정도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매일, 매순간 학생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크고 작은 상해와 사고에 노출됩니다. 특수교육지도사의 87%가 사고를 경험할 정도로 현장은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업'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현업고시 배제는 단순한 분류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권의 박탈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우리의 안전 대책을 논의하려 해도 대상 직종이 아니라며 거부당하기 일쑤입니다. 위험은 현장에 가득한데, 이를 예방하고 개선할 법적 권한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 모순을 이재명 정부는 해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교육 지원 업무를 즉각 현업 업무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 매뉴얼을 수립하고, 노동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정 안전교육을 보장하십시오.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정부라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차별부터 끝내야 할 것입니다.

[현장발언3] 김혜원 서울지부 조합원 (과학실무사)

저는 서울의 학교에서 과학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조합원입니다. 오늘은 산업 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 고시가 학교 과학실 현장에 실질적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그 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실무사는 매일 아침 수업 전에 혼자 과학실에 들어갑니다. 염산, 황산, 질산 등의 화학약품을 희석하고 기자재를 세팅하며, 수업이 끝나면 실험 폐수를 처리하고 유리 기구를 세척합니다. 독극물 관리대장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직접 작성하고, 안전관리 점검표와 폐수·폐기물 관리대장도 기록합니다. 학교 과학수업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과정에 과학실무사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정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즉 화학 물질을 상시적으로, 반복적으로, 장기간 취급하는 것이 이 직종의 본질입니다. 공장 현장 노동자와 본질적으로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해 2025년 3월, 서울시교육청은 과학실무사, 교무실무사, 전산실무사를 '교육실무사(통합)'이라는 하나의 직종으로 통합했습니다. 서울에서 과학실무사라는 직종명은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직종이 통합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화학약품을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은 직종으로 묶입니다. 작업환경 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하는지, 학교도 교육청도 기준을 잡지 못합니다. 직종이 사라지면 대상자도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행정 편의를 위한 통합이,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교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외부 컨설팅 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을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서울 안에만 초·중·고등학교가 1,300개가 넘습니다. 그 모든 학교 과학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관리가, 정작 그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보호 없이 방치된 채, 외부 용역에 맡겨져 있는 것이 지금 서울의 현실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에 산업안전보건과가 있고, 현업업무종사자 안전보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약품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과학 담당 교육실무사가 그 교육 대상에 실질적으로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업업무 고시 확대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은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보호 조항이 적용되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학교 과학실 업무는 이 고시에서 명확히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학약품을 매일 취급하는 것이 현업이 아니라면 무엇이 현업입니까.

현업업무 고시가 학교 과학 담당 교육실무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할 때, 비로소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이 의무가 되고, 보호구 지급과 유해요인 관리가 제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처럼 학교라는 이유로, 통합 직종이라는 이유로 적용 근거가 모호한 채 방치된다면, 수십 년째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온 조합원들의 건강은 제도 밖에 계속 남습니다.

실험실 안전은 한 사람의 책임감이 아니라 제도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현업업무 고시의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증언] 서정은 전국사서분과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3일은 ‘세계 책과 도서관의 날’ 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도서관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책과 도서관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는 이 자리에 나와 직접 발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나마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사서들의 산업재해 신청율은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사서가 현업고시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치면 “산재 신청” 이 아니라 “개인이 치료하는 것” 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학교도서관 그리고 전국 도서관 사서들의 현실입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십여 년 동안 학교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손가락 질환으로 변형이 왔고, 어깨 통증과 손목터널증후군을 겪었으며, 비염과 먼지 알러지로 인해 눈에 출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혼자 장서점검을 하다 이석증으로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저 한 사람의 개인도 셀 수 없이 많은 질병과 사고를 당했지만 저 또한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했고 산재 신청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노동조합을 통해 “일하다 다치면 산재” 라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질병과 부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도서를 반복적으로 옮기며 허리와 손목에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고, 책면지로 인해 피부병과 호흡기 질환이 발생합니다. 장시간 전산업무와 자료 정리로 눈의 피로와 안질환도 이어집니다.

또한 단독 근무와 학생 대응, 민원 처리 속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 소진까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병들 역시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인정받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문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질병과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은 매우 미미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산재 신청이 적다는 것이 산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부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인식 전환입니다. 현업고시 확대는 그 출발점입니다.

사서를 안전관리 체계로 포함시키십시오. 모든 교직원을 안전관리 체계 안으로 포함시키십시오.

학교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교육 현장에서 위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모두가 함께 이뤄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학교 현장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안전한 일터’를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국가의 핵심 책무로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서 있는 학교 현장은 여전히 산재의 위협이 일상이 된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업무에 따라 안전할 권리가 차별받고, 명백한 발암물질이 범망을 피해가는 현실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이면입니다.

이에 우리는 학교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조리흡’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물질로 지정하고 ‘건강관리카드’를 도입하여 퇴직 후 안전까지 보장하십시오.

급식실의 폐암 대란은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구조적인 산재입니다. 조리흡은 급식 노동자의 폐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임에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물질로 지정되지 않아 예방과 보호 조치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리흡을 법정 유해물질로 명시하고,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도 국가의 책임 아래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며 자신의 건강권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특수·사서·과학실무사 등을 ‘현업 업무’에 즉각 포함하여 안전 교육과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현재 고용노동부의 낡은 현업고시는 학교 내 수많은 업무를 산안법의 핵심 보호 장치인 안전보건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참여로부터 배제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학생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상해 위험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과학실무사는 유해 화학물질과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도서관 사서는 상시적인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으로 인해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현업 업무로 인정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일터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현업고시 확대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안전 차별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노동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학교 현장을 ‘산재 백화점’ 으로 방치해 왔음을 자성하고, 즉각적인 법령 및 고시 개정으로 응답하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안전한 일터’ 가 학교 문턱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 노동자가 참여하는 안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실 조리흡을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물질로 지정하고, 관리하라!

학교의 안전 사각지대 없애고, 현업고시 확대 개정하라!

조리흡 유해물질 지정, 현업고시 확대개정으로 모두가 안전한 학교 쟁취하자!

2026년 4월 23일(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끝